



2017년 5월 24일

임성학_서울시립대학교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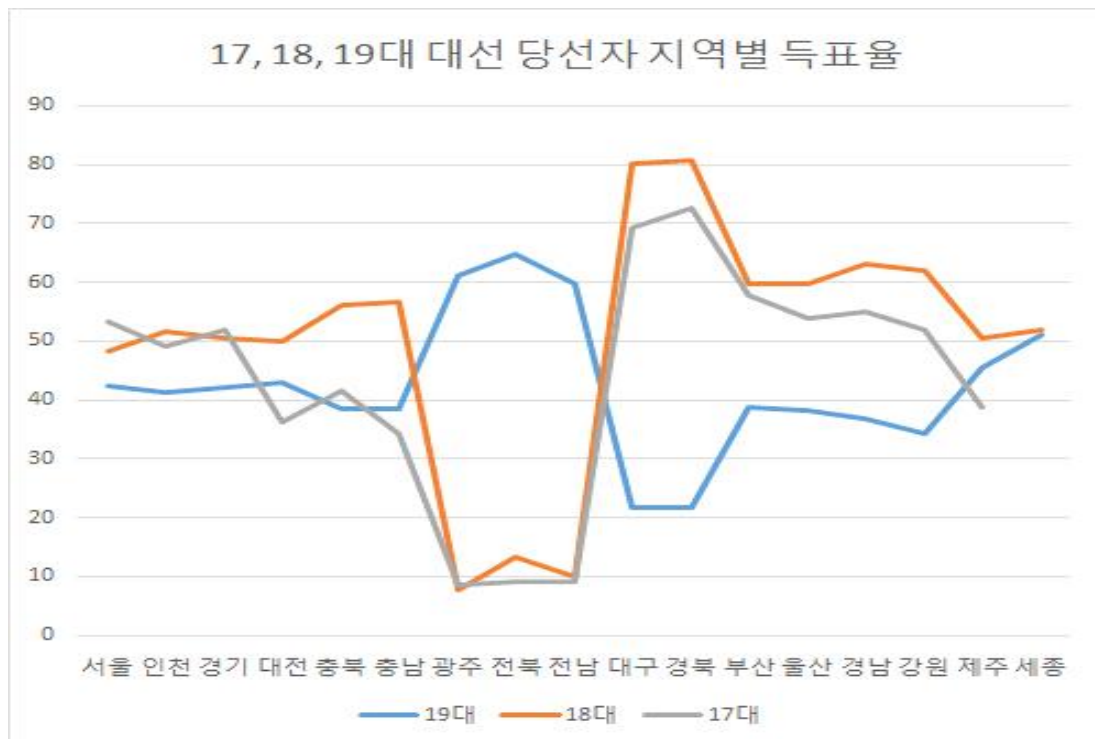
- 19대 대선은 기존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탄생해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영남권의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호남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여전히 진보정당 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고 있어 지역주의 약화는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다.
- 보수와 영남, 진보와 호남의 이념적, 지역적 차이는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주의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두 지역의 이념적 차이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국정과제 등의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외교안보이슈에 대한 지역적 동감이 생겨날 수 있다면 이념에 의한 지역주의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추세로 인해서인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 약화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응답이 74.7%이었고 약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24.2%에 그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약화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요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로 작동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과 정치적 정체성, 정당 정체성, 이념성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선거에 중요한 장기적 요인으로 진화하였지만 점차 투표에 있어 단기적인 요인인 경제상황, 인물, 특정 이슈, TV 토론회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주의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 유권자들의 공공 의제 인식

- 각 후보에 대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특정 후보가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현상이 줄어들어 지역주의 약화의 단초를 볼 수 있었다.
- 19대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전북에서 가장 높은 64.84%의 득표율을 반면 경북에서 가장 낮은 21.73%의 득표율을 보여 범위(range)가 43.11%포인트로 나타났다. 18대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 최대 경북 80.82%, 최소 7.76%로 범위는 73.06%포인트, 17대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최대 72.58%, 최소 9.04%로 그 범위는 63.54%포인트였다. 문재인당선자가 상대적으로 지역적 지지격차가 적었다는 것은 특정지역의 몰표현상이 줄어들고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9대 대선에서 지역주의의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17, 18, 19대 대선 당선자 지역별 투표율



자료: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호남지역이 지지하는 후보가 2명이 나와 특정 후보에 쏠림현상을 줄어들었지만 전국 득표율 24.03%로 2위가 된 보수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광주 1.55%, 전남 2.45%, 전북 3.34% 밖에 득표하지 못해 호남권의 지역주의와 반보수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호남권의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

- 지역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직후 “이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해진 선거였다.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하였다.
- 전국 평균으로 ‘매우 그렇다’ 20.8%, ‘그렇다’ 54.0%로 대답해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74.7%이었고 ‘별로 그렇지 않다’ 18.9%, ‘전혀 그렇지 않다’ 5.2%로 약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24.2%에 그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약화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고).

[표 1] 거주지역 따른 지역주의 약화에 대한 인식 (%)

	약화되었다	약화되지 않았다	기타/모름/무응답
서울	73.5	26.1	0.4
인천/경기	74.4	25.6	0.0
대전/충청/세종	76.8	23.2	0.0
광주/전라	73.1	24.6	2.4
대구/경북	70.7	28.6	0.7
부산/울산/경남	79.4	16.1	4.5
강원/제주	74.6	25.4	0.0
전체	74.7	24.2	1.1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크게는 차이가 없지만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79.4%로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구/경북지역의 응답자는 가장 낮은 비율인 70.7%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영남권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주의 평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시와 시지역의 경우 각각 75.2%, 75.3%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하였지만 군지역 응답자는 67.5%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덜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구가 적고 정치적 정보의 유통이 잘 안되는 촌락지역이 보다 전통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이슈

-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수와 영남권은 한미동맹과 대북강경의 성향을 보이는 반면 진보 호남권은 균형외교와 대북대화의 성향을 보여 외교안보분야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이념적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 57.2%로 조사되었지만 대구/경북은 68.1%, 부산/울산/경남은 64.9%로 가장 강하게 찬성하는 지역은 영남권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광주/전라는 41.9%만 찬성하고 50.6%가 반대해 반대의견이 많아 영남과 호남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표 2] 참고).
- 대북정책에 있어서 교류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은 50.5%, 강경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46.1%로 나타났다. 대북정책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른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전라지역은 73.0%가 교류 강화를 선호하지만 대구/경북은 52.6%, 부산/울산/경남은 52.1%로 가장 강하게 강경정책을 찬성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고).

[표 2] 거주지역 따른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분포 (%)

	찬성	반대	기타/모름/무응답
서울	52.5	43.5	4.3
인천/경기	57.1	39.6	3.3
대전/충청/세종	56.9	35.5	7.9
광주/전라	41.9	50.6	7.5
대구/경북	68.1	27.7	4.1
부산/울산/경남	64.9	29.1	6.0
강원/제주	63.3	33.1	3.6
전체	57.2	37.9	4.9

[표 3] 거주지역 따른 대북정책 방향 반대 분포 (%)

	교류강화	강경정책	기타/모름/무응답
서울	51.1	45.2	3.7
인천/경기	48.7	48.7	2.5
대전/충청/세종	50.1	45.2	4.8
광주/전라	73.0	22.7	4.3
대구/경북	46.0	52.6	1.4
부산/울산/경남	43.2	52.1	4.6
강원/제주	44.6	51.7	3.7
전체	50.5	46.1	3.4



- 반면 전통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 분류기준인 경제정책의 방향인 성장 대 복지에 서 거주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지 52.2%, 성장 46.4%를 찬성하고 있어 복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조금 많게 조사되었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광주/전라가 54.3%로 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산/울산/경남 45.2%, 대구/경북 44.4%로 복지선호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지만 지역별 복지선호는 다른 이슈에 비해 차이가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고).

[표 4] 거주지역 따른 복지 대 성장 분포 (%)

	복지	성장	기타/모름/무응답
서울	52.2	46.4	1.4
인천/경기	50.9	48.2	0.9
대전/충청/세종	43.9	51.9	4.2
광주/전라	54.3	41.5	4.2
대구/경북	44.4	52.9	2.7
부산/울산/경남	45.2	52.6	2.1
강원/제주	52.3	42.6	5.1
전체	49.3	48.5	2.2

-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 평균적으로 일자리 23.2%, 경제성장 19.1%, 정치개혁 15.0%, 안보 13.5% 등이 최우선과제로 선택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제성장 21.2%, 일자리 19.4%, 안보 17.2%, 국민통합 12.8% 순으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경제성장 26.2%, 일자리 24.6%, 정치개혁 15.0%, 국민통합 11.7% 순으로, 광주/전라의 경우 일자리 20.4%, 경제성장 18.9%, 안보 14.1%, 정치개혁 13.9% 순으로 조사되어 최우선과제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4. 사회균열에서 이슈로

-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주요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로 작동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과 정치적 정체성, 정당 정체성, 이념성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선거에 중요한 장기적 요인으로 진화하였다.
- 이런 장기적 요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탈정당화(party dealignment), 탈계급화(class alignment), 탈이념화(the end of ideology)하여 점차 단기적인 요인인 경제상황, 인물, 특정 이슈, TV 토론회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누구를 찍을지 언제 결정하셨습니다?”라고 질문하였다. ‘투표일 한달전경’ 혹은 ‘투표일 한달 이상전에’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광주/전라는 45.8%, 부산/울산/경남 38.1%, 대구/경북은 35.1%, 순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평균이 39.4%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전라의 경우만 장기적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5] 참고).
- 서울은 41.5%, 인천/경기 39.8%, 대전/충청/세종 38.5%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후보를 정했고 강원/제주지역만 29.4%로 후보 결정이 가장 늦었다. 영남권은 영남지역을 대표했던 보수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되었고 선거초반에 당선가능성도 낮아 후보선택의 시기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을 비교해보면 ‘투표일 한 달 전경’ 혹은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54.2%, 대구/경북은 51.5%, 광주/전라는 47.8% 순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평균이 50.4%를 기준으로 보면 영남권이 장기적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6] 참고).
- 강원/제주지역이 68.1%로 가장 빨리 후보를 정했고 인천/경기 49.1%, 대전/충청/세종 49.1%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후보를 정했고 서울만 45.8% 상대적으로 후보 결정이 가장 늦었다.

[표 5] 2017년 거주지역별 후보결정시기

	투표 당일	투표 2-3일 전에	투표 1주일 전경	후보자 등록전후	투표일 한달 전경	투표일 한달 이상 전에	모름/무응답
평균	9.4	17.1	20.3	13.8	11.7	27.7	0.1
광주/전라	8.2	12.6	17.6	15.8	10.6	35.2	0.0
대구/경북	7.6	15.6	25.6	16.1	13.2	21.9	0.0
부산/울산/경남	7.3	16.6	18.1	19.8	9.7	28.4	0.0

[표 6] 2012년 거주지역별 후보결정시기

	투표 당일	투표 2-3일 전에	투표 1주일 전경	후보자 등록전후	투표일 한달 전경	투표일 한달 이상 전에
평균	6.2	10.0	12.2	21.4	15.6	34.8
광주/전라	2.6	15.7	9.6	24.3	19.1	28.7
대구/경북	9.4	7.0	10.2	21.9	14.8	36.7
부산/울산/경남	5.5	8.3	12.2	19.9	13.3	40.9



5. TV 토론회의 영향

- 일반적으로 TV 토론회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토론을 잘하면 더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못한다고 해서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지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기존의 이론에 부합하는 응답이다.
-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되었다’와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새로 생겼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TV 토론회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단기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체적으로는 78.4%가 기존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7%가 지지후보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지지후보가 생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지후보교체와 새로운 지지후보가 생긴 것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 35.7%, 서울 24.8, 대구/경북 24.2%로 평균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천/경기 20.6%, 부산/울산/경남 18.1%, 대전/충청/세종 15.2%, 광주/전라 13.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고).
- 이번 대선에서는 광주/전라지역이나 부산/울산/경남 지역보다 대구/경북지역이 단기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대선후보 토론회 이후 후보 평가 변화 (%)

	지지후보 더 좋아하게 됨	지지후보 유지, 그러나 지지강도 약화	변화없음	지지후보 교체	새로운 지지후보 생김	기타/모름/무응답
서울	11.5	22.9	39.5	21.8	3.0	1.3
인천/경기	11.6	17.5	50.0	15.0	5.6	0.3
대전/충청/세종	9.6	24.7	49.7	12.5	2.7	0.8
광주/전라	15.2	19.2	51.2	10.2	3.1	1.0
대구/경북	14.6	19.3	41.9	18.2	6.0	0.0
부산/울산/경남	13.6	13.4	52.7	13.9	4.2	2.2
강원/제주	11.5	9.3	43.0	30.3	5.4	0.0
전체	12.4	18.7	47.3	16.4	4.3	0.9



EAI 2017 대선 패널 2차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7년 5월 11 - 14일 (4일간) · 5월 11일: 13시-21시 · 5월 12일: 13시-21시 · 5월 13일: 13시-21시 · 5월 14일: 13시-21시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1차 조사 응답자(1,500명)
표집방법	1차 조사 응답자 대상 전수조사
표본크기	1,157명 · 유무선 RDD 518명, 액세스 패널 639명 · 유선번호 127명, 무선번호 1,030명
패널 유지율	77.1% (1차 응답자 총 1,500명 중 1,157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2.5\%$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질문내용	본 보고서 본문에 제시

EAI 2017 대선 패널조사 연구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이한수(아주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한정훈(서울대) · 배진석(고려대)
- 조사팀 : 오승호 · 전주현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남지현 연구기획실 연구원(02-2277-1683 내선112, jhnam@eai.or.kr)

